

대선운동후이재명파기환송심개시

파기환송심, 이례적으로 서류 우편·인편 동시 송부 송달 이뤄지면 공판 진행...불출석사유서 낼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오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리는 대선후보의 재판에 대한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하는 만큼 이 후보가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심리 중인 자신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서도 재판부에 대선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대선 본투표일을 1주 앞둔 오는 27일을 공판 일정으로 지정하려 하자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 달라"고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상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을 늦출 수 있으면 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첫 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이상 본인의 의사만으로 재판 절차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등에 따른 절차인데, 두 번째 기일에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결석재판)할 수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재판에 불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재판에 출석하고 입장을 밝히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소송서류 송달 문제도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지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및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로 전

달되지 않자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통지서가 10일 만에 전달됐던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는데, 우편 뿐만 아니라 인편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법과 자택이 있는 인천지법 집행관에 동시에 소송서류 발송을 촉탁한 상태다.

만약 보좌진 등이 서류를 받지 않다면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는 '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이 후보의 주거나 사무소가 분명한 만큼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해 서류가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것은 적어도 대선 본투표일 전까지는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론상으로 변론을 마친다면 바로 당일 오후 선고할 수도 있고 그날 바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같이 정치적 개입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럴 가능성은 낮다.

만약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판결은 대선 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100만원 이하로 나와 사법리스크가 완화된 경우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지 다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인 중 '골프 발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인'은 이 후보가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휴 끝, 붐비는 공항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도착층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전남서 교통사고 가장 많은 곳은 여수...2년 연속 최다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여수시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순천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8382건(사망 202명) ▲2023년 8344건(사망 228건) ▲2024년 8272건(사망 20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전남 시·군 중에서도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여수시로 집계됐다. 사고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여수는 전년(1304건) 대비 8.59% 증가한 1416건을 기록, 2년 연속 전남 최다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목포시 1197건, 순천시 1053건, 나주시 626건, 광양시 608건 등 순이었다.

2022년까지 전남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목포였으나, 2년 새 18.57%(273건)이 줄어들면서 1위 자리가 여수로 바뀌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순천시로 한 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수와 나주가 각각 16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암군도 13명이 발생해 4번째로 많았다.

전남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수를 비롯해 나주와 무안군의 사고 건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주는 지난해 사고가 전년(521건) 대비 20.15%(105건)이 더 늘었다. 무안은 지난해 308건으로 전년(220건)에 비해 40%(88건)나 급증했다. 나주와 무안은 각각 빛가람혁신도시 조성과 전남도청 이전 이후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뤄지는 등 인구가 증가, 출퇴근 인구도 늘어난 게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남부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전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박충훈)에서는 최근 오후 2시부터 차량 정체 구간에 대한 '소방차 길 터주기' 출동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서선욱기자



신안소방,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대비 도상훈련 실시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최근 본서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담양소방, 어린이 날 행사 전 소방안전관리자 간담회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체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량주마을 등 3개소(곤충박물관, 기후변화체험관)를 방문해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소방, 건설현장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 방문진

구례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최근 관내 용방초등학교를 방문해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례=양창식기자



강진소방, '놀며 배우는 안전! 119안전체험장 운영'

강진소방서(서장 정영인)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어린이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김영일기자



순천남도파출소,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소장 주춘영)는 관내 3개소(도사·남제·상사) 이장·동장 1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보이스 피싱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순천=김승호기자